

요약보고서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 및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

2020.04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Contents

I. 과업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3
2. 과업 범위	4
II. 제 1 단계 균형발전 사업 실태 분석	5
1. 점검·평가 개요	7
2. 평가 대상 및 기준	8
3. 개선 과제	10
III. 충청남도 불균형 실태	15
1. 인구	17
2. 산업·경제 분야	18
3. 삶의 질 분야	23
IV. 제 2 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29
1. 제 1 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검토	31
2. 계획과제	34
3. 기조 및 방향	36
4. 기본 구상	37
5. 단계별 추진방안	41
6. 사업 지원 분야	43
7.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45
V. 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51
1. 계획수립 체계 개선	53
2.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개선	54
3. 모니터링, 평가 등 단계별 사업 관리 구체화	55
4. 충남도 역할 강화	56
5. 모니터링, 평가, 추진체계 개선	57
참고문헌	61

I

과업의 개요

- 1. 배경 및 목적 3
- 2. 과업 범위 4

1. 배경 및 목적

1) 배경

국가 지역간 불균형 양상과 동일하게 충청남도도 그대로 발생

- 국가주도 압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역불균형 심화되었고, 충청남도도 불균형 양상이 그대로 발생
 -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격차, 수도권+경부축 발전지역과 나머지의 쇠퇴지역의 양권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발생
- 충청남도도 국가차원의 불균형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용되어 불균형 심화

충남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2008-) 및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 예정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2007. 3. 30) / 전국 최초
 -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8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을 지원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른 제2단계 사업 개선 요구

- 총 198개 지구, 총 사업비 : 10,847억원(국비 2,743억원, 도비 3,578억원, 시군비 등 4,526억원)
- 1년당 사업비 : 831억원(국비 211억원, 도비 275억원, 시군비등 345억원)
 - 제1기 균형발전사업(2008년~2012년) : 54개 지구, 4,453억원
 - 제2기 균형발전사업(2013년~2017년) : 68개 지구, 4,103억원
 - 제3기 균형발전사업(2018년~2020년) : 76개 지구, 2,291억원

2) 목적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대내외적 여건변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정책 전환 시사점 도출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마련

2.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체

- 충청남도 전체(지역발전격차 분석)
-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지역(9개 시군-균형발전 지원사업 평가)

시간적 범위 : 2008-2030년

- 제1단계(제1기, 제2기, 제3기) : 성과평가(제3기 : 과정평가)
- 제2단계 : 기본계획 수립

내용적 범위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실태 조사·분석, 2단계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실태 조사 · 분석
 - 조사 분석 방법 설정 → 실태조사(정책-계획적 측면, 사업측면, 추진조직측면, 운영관리측면, 제도적 측면)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효과 분석 및 과제 도출
 - 지표 개선 효과 분석, 사업효과 분석, 사업 개선과제 도출
- 지역균형발전 관련 여건변화 전망 및 사례 조사
 - 충남 불균형 실태, 중앙정부 균형발전 관련 정책환경 변화, 타 광역지자체 정책 및 사업 사례 조사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관련계획간 정합성 유지 및 차별성 확보방안, 추진시스템 구축·운영방안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 추진체계 정비, 지원대상지역·지원사업 유형 세분화, 사업평가 체계 보완

II

제 1 단계 균형발전 사업 실태 분석

- 1. 점검·평가 개요 7
- 2. 평가 대상 및 기준 8
- 3. 개선 과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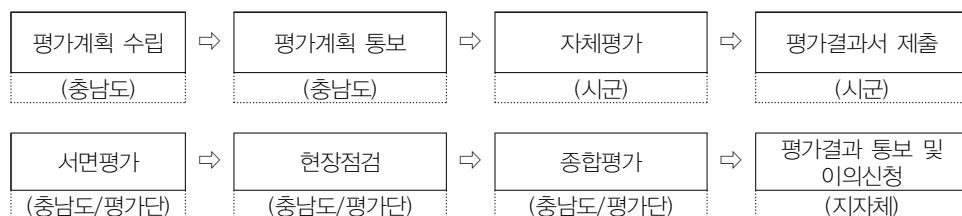
1. 점검·평가 개요

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는 지난 2007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도차원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조례에 근거하여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총 198개 사업, 1,084,716백만원)
 - 제1기(2008~2012) : 54개 사업, 445,279백만원
 - 제2기(2013~2017) : 68개 사업, 410,361백만원
 - 제3기(2018~2018) : 76개 사업, 229,076백만원
- 따라서, 8개 시군, 1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상황, 추진실적, 운영관리상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 추진코자 하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개요

- 평가 대상 :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시군별, 사업별)
 - 8개 시군, 2008 ~ 2018년, 198개 사업, 1,084,716백만원(국, 도, 시군비 등)
- 평가기간 : 2019. 6. 25(종합평가)
- 평가지표 및 내용 : 3개 분야
 - 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운영관리단계
- 평가반 : 10인(총괄 - 균형발전담당관)
 - 균형발전위원(5인) - 충남연(4인) - 충청남도(1인)
- 절차



2. 평가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전체 : 8개 시군, 198개 사업
 - 제1기 균형발전사업 : 운영관리 단계 평가
 - 제1기 균형발전사업은 2013년 평가 시행
 - 제2기 균형발전사업 : 계획 단계, 집행단계, 운영관리단계 평가
 - 제3기 균형발전사업 : 계획 단계 평가

• 시군별 사업비

구 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계	균특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98	1,084,716	274,264	357,770	374,979	77,703
공주시	18	98,177	24,039	35,667	38,371	100
보령시	13	108,408	25,716	38,338	43,854	500
논산시	23	104,198	31,865	37,399	34,934	
금산군	34	183,267	37,939	47,311	59,435	38,582
부여군	26	153,810	38,888	51,856	54,241	8,825
서천군	32	133,535	37,359	48,705	42,948	4,523
청양군	33	155,724	41,375	51,223	53,506	9,620
태안군	19	147,597	37,083	47,271	47,690	15,553

평가 기준

- 평가 항목별 배점(전문가 AHP 결과값)

구분	주요항목	배점	비고
계획단계 (43%)	사업계획 타당성	16%	개발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 충실성	10%	
	사업계획 적정성	6%	
	지자체 관심도	11%	
집행단계 (27%)	사업추진가능성	13%	시군 집행
	사업추진 실적	6%	
	사업추진체계	8%	
운영관리단계 (30%)	관리운영체계	14%	사업 완료 후
	사업파급효과	10%	
	갈등대처 및 리스크 관리	6%	

항목별 세부 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주요내용
계획단계 (43%)	사업계획 타당성 (16%)	목적 부합성	◦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 지자체 발전방향과의 부합 여부
		지역특성반영여부	◦ 지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수요확보 가능성	◦ 수요 추정 적정성
		유사시설 운영현황	◦ 지역내 유사시설 운영 현황 검토 및 경쟁가능성 여부
	사업계획 충실성 (10%)	사업의 구체성	◦ 위치, 세부사업내용 등의 구체성 수준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수준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6%)	사업내역 산정 적정성	◦ 사업비 산정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원조달 현실성	◦ 자원조달 방안 구체성
		목표달성 적정성	◦ 목표달성 가능성(과대포장 여부)
	지자체 관심도 (11%)	지자체장 관심도	◦ 단체장 관심도
		의회 관심도	◦ 정례보고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 관련법령, 부처 협의 의견 반영 정도
		주민 등 민간 의견 수렴 정도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도
집행단계 (27%)	사업추진가능 성 (13%)	토지확보 용이성	◦ 시설사업의 토지 확보 여부
		사업시행자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시행자 선정 및 협의 진행 수준
	사업추진 실적 (6%)	예산 집행을	◦ 예산 대비 집행액 수준
		자체재원 확보율	◦ 목표 대비 실제 투입액
		당초계획 변경 여부 및 적정성	◦ 계획 대비 변경 수준 및 적정성 - 목적 대비 세부내역 변경
	사업추진 체계 (8%)	전담체계구축 및 운영	◦ 행정, 민간 등 전담조직 구축 운영 수준
		자체 점검 시스템 구축 운영 여부	◦ 자체 점검 및 평가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단계 (30%)	관리운영체계 (14%)	유지관리 조례 및 계획 수립 여부	◦ 운영관리 조례 마련 여부 ◦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유지관리계획 내용 명확성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 주제, 절차, 세부내역
		사업운영비 확보 수준	◦ 운영비 조달 및 확보 수준 ◦ 운영 수지(흑자, 적자) 여부
	사업파급효과 (10%)	이미지제고 수준	◦ 방송, 신문, SNS등 대외적 홍보 수준
		경제성 및 파급효과	◦ 경제성, 파급효과
		수혜주민 수준	◦ 이용객수, 만족도 실적 ◦ 경제성 및 파급효과 ◦ 매출액, 고용인원 증가 여부
	갈등대처 및 리스크 관리 (6%)	갈등, 사업지연 대응 방안	◦ 문제점 및 대책 기술 적정성
		후속 연계사업 여부 운영관리 개선 적정성	◦ 연계, 후속사업 추진 여부 ◦ 운영관리 개선 계획 적정성

3. 개선 과제

1) 정책적 개선과제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원인별 처방의 인식 간극 발생

- 지원대상지역 선정시 종합점수 평균 이하 50% 지원 대상지역 ↔ 30% 이하 대상지역 인식차
-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실제 지원사업간의 관계성 빈약 → 목적성 훼손, 시군 현안사업 인식
 - 국가계획은 일반적으로 하위 30% 시군을 지원
 - 특정분야가 취약한 시군이라 하더라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사업내용 빈약

계획 위계별(기본, 개발, 시행계획) 계획내용 차별성 불분명, 계획 수립 후 점검·평가 소홀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 각 계획 위계별 목적, 내용, 위상이 불분명(기본계획 / 개발계획 / 시행계획)
- 개발계획 승인 이후, 충남도의 역할을 재정 집행률에 집중 ↔ 시군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평가 소홀

지역경제 활성화·자립역량 배양사업 미흡, S/W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용 미흡

- 관광분야에 대한 사업비 투입(전체 대비 45.0%)이 가장 높고, 지역경제활성화는 25.2%
- 시설중심의 사업계획 대다수 ↔ SW 등 비물적 사업에 대한 추진 기피

2) 사업적 개선과제

계획·추진사업의 균형발전 목적 부합성 빈약

- 균형발전위원회 사업심의시 지역발전 기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선정 사업이 시군 현안사업이라는 인식 → 사업 선정의 신뢰성 제기
 - 사업 변경시 사업 목적성 유지 빈약, 현안 사업으로의 대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목표 부정확 및 점검 체계 미흡

- 계획 성과목표에 대한 중요도, 인식도 미흡 → 형식적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와 공정간의 상호 점검 미흡
- 단위사업 성과목표 설정의 객관성 부족, 성과 도달을 위한 산출방식·점검방식 등 관리방식 미제시
 - 제1기,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성과목표 미설정 →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 성과 측정이 어려움

사업간 연관성 부족, 수요·타당성 확보 미흡, 사전이행조치 미흡

- 개발계획상 내역사업간 논리적 정연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 적은 계획수립 기간, 현안사업 중심의 계획수립·추진, 수요·타당성 부족, 사전 이행조치 미수행, 행정중심의 계획 수립,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미흡 등

도, 시군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 통합형,사업별 맞춤형 추진체계 빈약

- H/W중심의 사업추진시 행정중심의 추진체계 구축·운영은 가능 ↔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미담보
- 시·군내 균형발전사업 총괄·지원 부서간 협업 미흡 → 사업추진시 일체성과 지속성 미흡

3)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과제

계획단계 실태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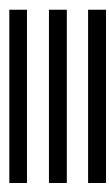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저발전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필요	저발전원인 해결사업에 집중 (인구, 산업, 재정)
	행정중심의 사업 발굴 제안 당시 현안에 집중	제안단계부터 민간 등 이해관계자 참여(G,L참조)
	수요 타당성 과대포장 다수 저가 용역 수행	면밀한 조사, 분석, 진단 요구 (전문가 자문, 용역사 수행)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간 연관성 매우 부족 (관광, 산업, 경제, 기반 등 다양)	방향과 사업간 연계성 확보, 패키지화 (현안사업 지양)
	위치, 세부내역사업 타당성 미흡 SW(역량강화)사업 인식 낮음 세부 내역사업에 현안사업 끼워넣기(일부)	사업 위치 명분, 타당성 구체화 역량강화사업 선추진(총괄부서) 제도화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기간 지연	준비된 사업, 해결가능한 사업만 제안 (토지, 지장물, 조직, 관련기관 등)
사업 계획의 충실성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현재 없음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제시 (과대포장 사업 사업비 조정)
	재원조달은 연차별 대부분 양호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
	성과 목표설정 매우 미흡 (1,2기 없음, 3기 빈약)	성과목표 설정 (개발계획, 시행계획에 적시, 점검·평가시 활용)
지자체 관심도	지자체장 관심도 높음 의회 관심도 상대적 빈약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단계 의회 보고
	관련기관 협의 사전 진행(3기)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충남도 관계부서 협의 구체화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빈약(1회성, 형식적)	개발계획 수립시 민간 조직 정비 제도화 (의견수렴, 운영관리주체 등)

집행단계 실태 및 개선과제

사업 추진 가능성	토지 확보 지연, 토지확보에 과다 지출(일부)	기 토지확보 및 가능한 사업만 추진
	사업시행자 선정·추진은 법적 요건 충족 소액 타당성 조사(다수), 사업 포개기(일부)	타당성 조사 내역을 개발계획에 반영
사업 추진 실적	예산 대비 집행은 원활 미집행분 전용(일부)	집행을 주기적 점검 미집행분 반납
	당초 계획 대비 세부내역 변경시 목적 훼손 사업 발생(일부)	중앙, 도 관련 실과 협의 전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전협의 제도화
	자체 자원 확보 가능 사업간 사업비 돌려막기 및 신규사업(일부)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위치, 사업 세부내역, 사업비 등)
사업 추진 체계	총괄부서 - 사업부서간 소통 미원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떨어짐	총괄부서-사업부서간 총괄 협의체 구성 업무 인수인계 철저
	자체점검시스템 없음 문제발생시 총괄부서 미인지	충남도 주기적 점검 시행

운영관리단계 실태 및 개선과제

관리 운영체계	대부분이 직영, 적자 위탁시 타당성 조사 빈약	완료 전 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시행
	운영계획, 운영방법, 운영주체, 운영비용, 운영절차 등의 내용 구체화 필요	운영계획을 근거한 지자체장, 의회 보고 및 충남도 제출(운영관리협약 근거)
사업 파급효과	보도자료에 의한 신문 홍보 다수	신문 외의 홍보 매체 다양화 (시행계획에 홍보계획 삽입)
	경제성, 파급효과 과대 추정(대부분)	시군 재정 압박 해소 위한 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시행
	주기적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시행(일부)	전체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주기적 시행 (총괄부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갈등 리스크 관리	사업부서 갈등관계 등을 총괄부서 미인지	총괄부서-사업부서간 총괄 협의체 구성 주기적 점검 시행(충남도)
	자립화 방안 미흡, 연속 군발사업으로 추진 (일부)	목표 달성 점검, 운영계획 구체화



충청남도 불균형 실태

1. 인구	17
2. 산업·경제 분야	18
3. 삶의 질 분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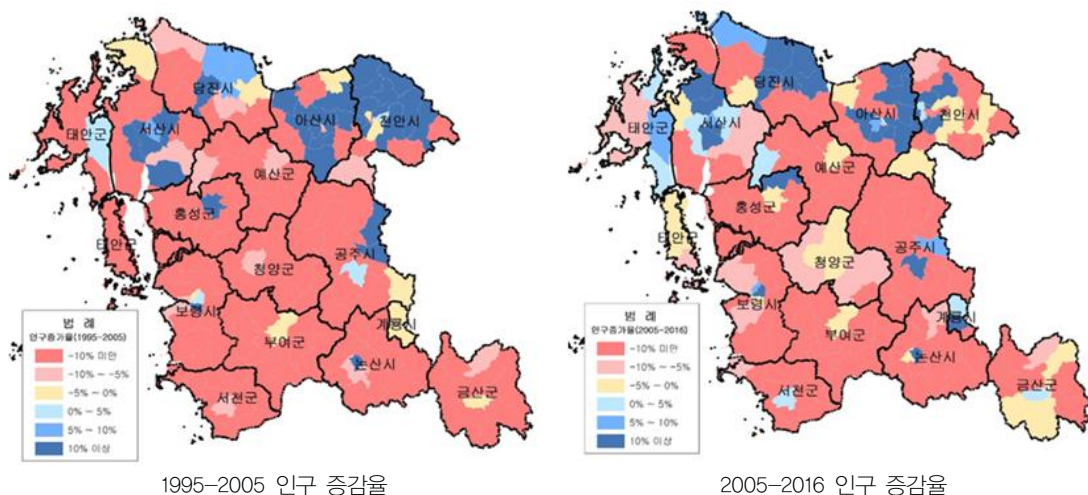
1. 인구

북부권과 외지역간 인구 격차는 지속 심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불균형 심화

- 충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소 및 격차 지속 확대
- 읍면의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읍면의 90%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간 인구 격차는 지속 심화, 저발전지역 존립 위협 수준

-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지만, 저발전지역의 인구는 지속 감소(-1.78%)§고령화 지수 : 저발전 지역 심각
 - 충남 23.2%(2030) → 28.9%(2040)
 - 발전지역 21.5%(2030) → 28.8%(2040)
 - 저발전지역 38.8%(2030) → 47.1%(2040)
- 출생아수, 인구부양비 등은 저발전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2030년 이후)
 - 저발전지역 유소년 증가율 -3.24%, 생산가능인구 -3.21%
 - 저발전지역 인구 부양비 87.4%(2030) → 117.4%(2040)



충청남도 읍면동별 인구 변화

충청남도, 충청남도 발전계획(2018-2022), 2018

2. 산업·경제 분야

1) 산업

제조업 중심 집적과 성장↔지역 서비스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상대적 저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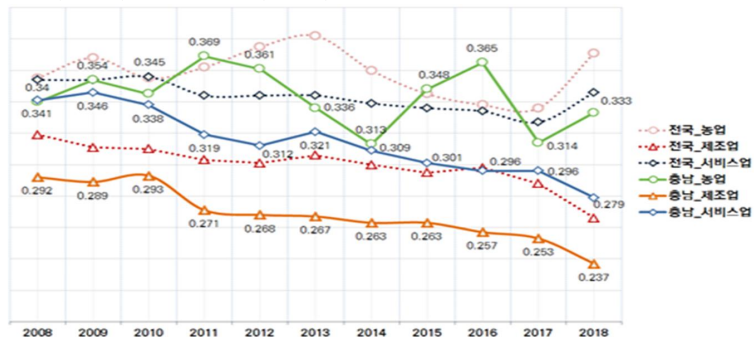
- 수출 제조업 기반 대기업 의존도 높은 성장
-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기업 연계구조 → 지역내 R&D, 설비 투자 빈약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 성장률 격차 확대

- 1인당 매출액은 증가추세§중소기업 매출액은 대기업 대비 낮은 증가세
- 중소기업 영업이익은 전국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대기업 대비 20% 수준)

제조업 격차 축소, 농가소득 정체 및 농가 양극화

- 산업별 임금은 전산업에서 상승세
- 제조업 격차는 축소, 서비스업 완화 추세
- 농업분야 변동폭이 크고, 농가 대비 농업소득은 감소, 소농과 대농간 소득격차 확대
- 농업소득 양극화 확대
 - 농가 평균소득은 정체 : 32.1백만원(2010) → 38.24(2017)
 - 소득 5분위 배율 확대 : 10.1%(2005)→ 14.5(2015)
 - 농업소득 38.8%, 겸업소득 13.9%, 사업외 소득 20.0%, 이전소득 20.9%, 비경상소득 6.4%
 - 중위값 비율 58.8%(2003) → 37.0%(2018)



산업별 임금불평등도(지니계수) 변화 추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08-2018),

충청남도,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2020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전문·단순기능 인력간 수요격차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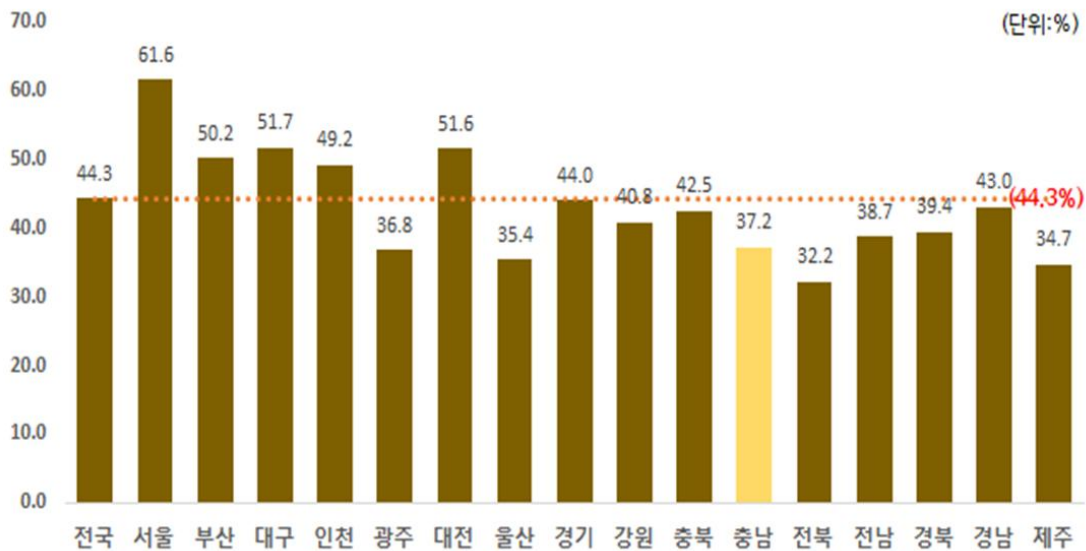
- 기술간 융복합화로 새로운 융복합 업종의 출현과 한계 업체 확대
- 4차산업 혁명 대응한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

생산과 소득, 소비와의 괴리 심각→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한계

- 대기업 중심의 생산중심지역이며, 소득, 소비의 연계성 부족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한계
- 다수기업 분공장 형태 입지로 영업잉여 역외 귀속 수준 높음 → 지역경제 성과 역외 유출 큼
- 5인 미만 소기업이 82%, 지역 고용은 26.7%

실거주지-근로시간 불일치 → 지역내 소비진작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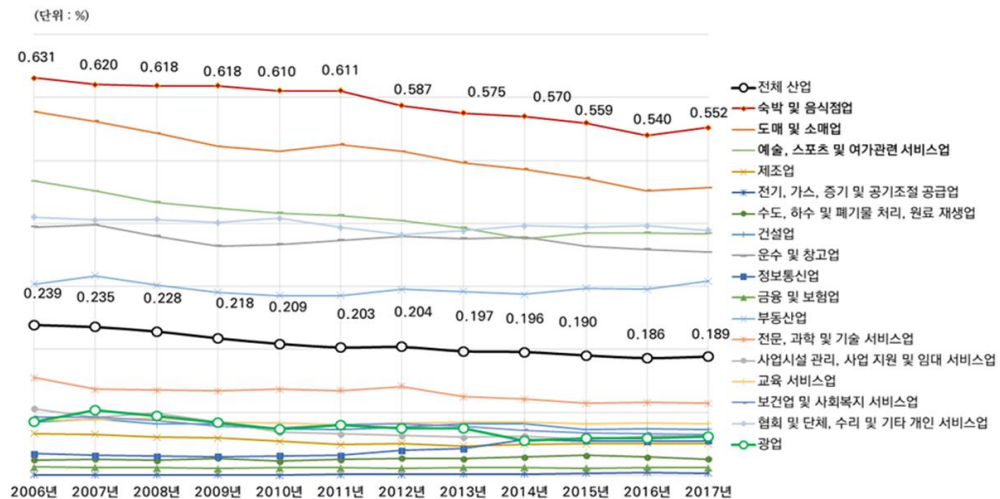
- 대전, 청주, 세종, 군산과 인접지역은 실거주지, 근로시간 불일치



시도별 제조업 본사 비중
 (단독사업체 제외,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충청남도,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2020

자영업자 과다상태로 지속·성장의 한계

- 충남 자영업자 비중 18.9% 낮아지는 추세
- 자영업자의 고령화 확대에 지속, 성장성에 한계
- 원인 : 전 근대적 경영, 정보와 자원에 취약, 조직화 미흡, 영세화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추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기준)

충청남도,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2020

영세업체, 개인사업체 비중이 지배적

- 단독경영 및 가족구성원에 의존한 영세업체가 다수
 - 서비스업 개인사업체 40.0%, 회사법인 3.6%, 회사이외법인 38.2%
 - 도소매업 개인사업체 71.7%, 회사법인 23.4%, 회사이외법인 4.8%
 -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체 88.9%, 회사법인 10.2%, 회사이외법인 0.8%
 - 보건사회복지업 개인사업체 50.2%, 회사법인 1.4%, 회사이외법인 32.8%
 - 문화예술서비스업 개인사업체 58.7%, 회사법인 13.3%, 회사이외법인 22.1%
- 자영업자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 비중이 지배적
 -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이 매우 취약
 - 서비스업 전체 자영업자 25.5%, 상용종사자 55.1%
 - 도소매업 자영업자 45.6%, 상용종사자 37.6%

-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55.2%, 상용종사자 22.4%
- 보건사회복지업 자영업자 6.4%, 상용종사자 82.0%
- 문화예술서비스업 자영업자 38.4%, 상용종사자 32.6%

특화업종 및 고용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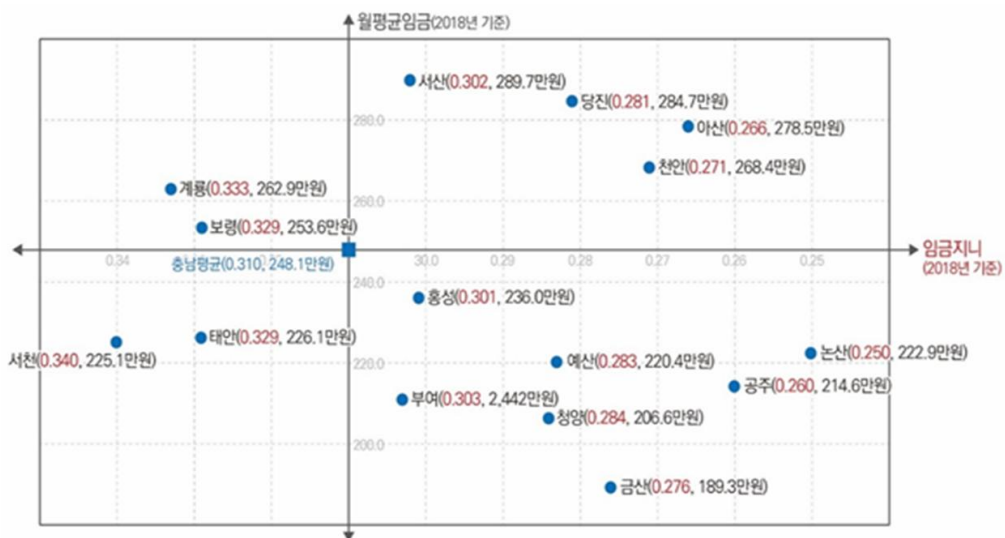
- 고용 증가산업 : 4차산업 혁명 선도산업 중심
 - 정보통신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전기전자기계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문화예술 스포츠 등
- 고용 감소 산업 :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해 쇠퇴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금융업, 운수업 등



충남 산업경제분야 특화업종 및 고용성장률

2) 소득

- 저소득층 소득격차 확대, 중산층 비중 감소 추세
 - 10분위 배율은 소폭 감소했다가 지속 확대 추세
 - 소득 배율은 9.5배(2008) → 12.3배(2018)로 격차 확대
 - 중산층 비율 61.5%(2008) → 57.4%(2018)로 감소(전국 9.9배 → 13.5배)
- 여성, 중장년, 고졸 이하, 임시·근로자가 열악
 - 성별 격차는 완화 추세이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속 확대
 - 50, 60대 이상의 소득 불평등도가 높음
 - 상용직은 소득불평등 완화하는 반면, 임시·일용직은 악화
 - 임시·일용직 평균임금은 낮은 수준이며, 완화 추세
 - 소득분위별 근로형태별 근로자 비중은 큰 격차 여전
- 월평균 임금 248.1만원, 지니계수 0.310
 - 산업지역인 북부권은 임금수준도 높고, 격차도 크지 않음
 - 해안지역은 임금수준도 낮고, 격차도 심각
 - 평균 임금보다 높은 시군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계룡, 보령
 - 평균 지니계수 보다 높은 시군 : 계룡, 보령, 서천, 태안



시군별 월평균 임금, 지니계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8)

충청남도,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2020

3. 삶의 질 분야

전국 보다 낮은 사교육비 지출, 평생교육 선호도는 문화·예술·스포츠가 높음

-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월평균 공·사교육비 증가 추세이고, 충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이하(전국 평균 29.1만원, 충남 18.7만원)
 - 평균 공교육비 : 초등학생 2.26만원, 중학생 3.38만원, 고등학생 20.78만원
 - 평균 사교육비 : 초등학생 26.63만원, 중학생 27.57만원, 고등학생 22.88만원
-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이며, 10-30대는 직업능력향상교육을 선호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단위 : 만원, %)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평균
공교육비	초	1.10	1.71	2.46	2.38	2.57	3.32	2.26
	중	1.81	2.62	2.78	4.74	3.91	4.42	3.38
	고	5.69	17.77	21.34	22.61	27.05	30.24	20.78
사교육비	초	5.86	16.11	24.05	31.21	34.94	47.60	26.63
	중	10.12	18.95	27.85	21.93	39.25	47.31	27.57
	고	2.49	9.93	17.19	30.06	33.83	43.79	22.88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응답 비율		37.1	46.1	51.0	52.8	54.0	57.5	49.8

자료 : 충청남도,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 2019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은 소득과 비례하며, 고소득층일수록 문화 활동 참여율 높음

- 관광활동은 49.4%, 문화예술관람은 52.5%, 스포츠 관람은 31.8%을 보이는 반면, 실제 문화예술 참여는 21.0%를 보임
-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이 저조
- 충남 53.2%, 60세 이상 18.4%, 100만원 미만 20.7%

문화활동 참여율

(단위 : %)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500만원 이상	평균
관광활동	37.6	46.6	57.2	75.7	49.4
문화예술 관람	20.4	33.1	50.2	75.6	52.5
문화예술 참여	8.8	13.1	18.3	33.2	21.0
스포츠관람	14.1	19.1	28.3	48.8	31.8

자료 : 충청남도,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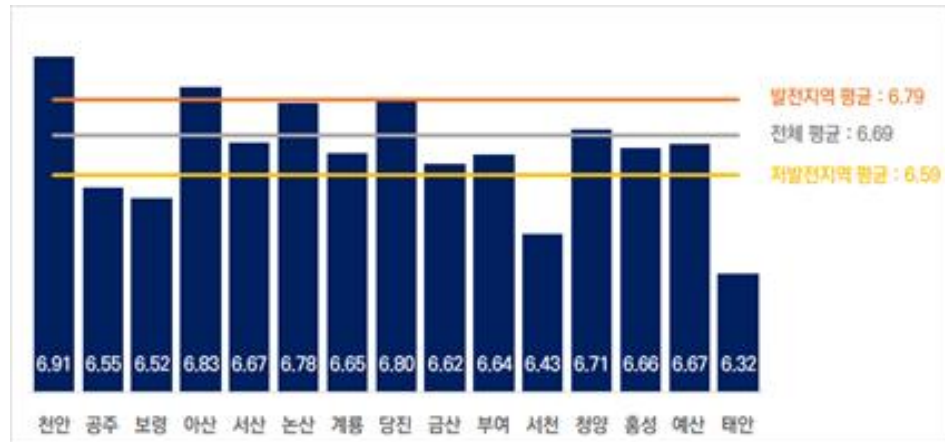
-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은 소득과 비례하며, 고소득층일수록 문화활동 참여율이 높음
 - 고령층일수록 삶, 행복에 대한 만족감은 낮은 추세를 보이며, 삶에 대한 만족, 가치, 행복 경험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승
 - 삶에 대한 만족도 : 6.08점, 50대 5.96점, 60세 이상 5.76점
 - 행복 만족도 : 충남 6.11점, 50대 6.00점, 60세 이상 5.75점
- 소득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가치, 행복 만족도가 비례하고, 고령층일수록 반비례
 - 고령층일수록 삶, 행복에 대한 만족감은 낮은 추세를 보이며, 삶에 대한 만족, 가치, 행복 경험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승
 - 삶에 대한 만족도 : 6.08점, 50대 5.96점, 60세 이상 5.76점
 - 행복 만족도 : 충남 6.11점, 50대 6.00점, 60세 이상 5.75점
- 시군별로는 발전지역일수록 행복만족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임
 -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이는 항목은 미래에 대한 만족도, 안정된 삶에 대한 만족도가 0.2p, 0.21p의 차이를 보이며, 자긍심,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낮음
- 행복에 미치는 높은 요인은 발전지역은 안정적 삶, 저발전지역은 자긍심임
 - 발전지역 대비 저발전지역의 상대적 행복 주요 요인 : 자연환경, 공동체, 주민 참여
 - 저발전지역 대비 발전지역의 상대적 행복 주요 요인 : 소득·소비, 문화·여가, 주거
 -

소득별 삶·행복에 대한 만족도

(단위 : p)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평균
삶에 대한 만족	5.55	5.79	5.99	6.23	6.24	6.56	6.06
삶에 대한 가치	5.49	5.90	6.10	6.34	6.37	6.71	6.15
행복 만족도	5.58	5.82	6.03	6.25	6.31	6.61	6.10

충청남도,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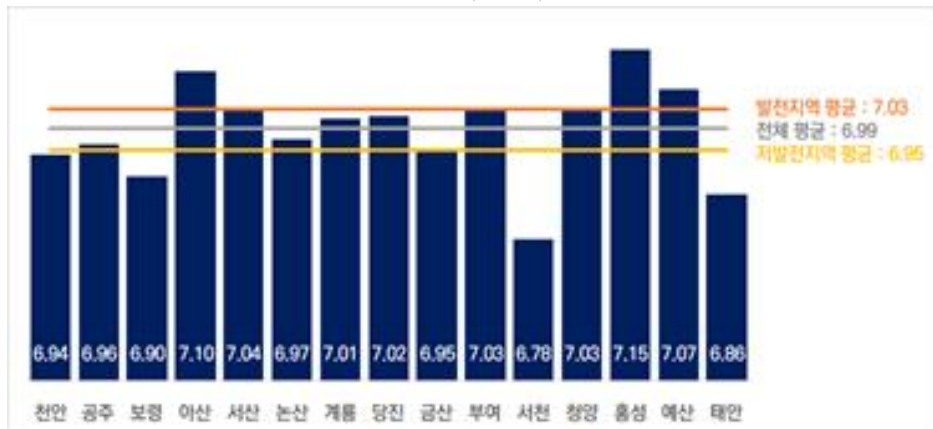
〈희망이 있는 미래(가족, 일, 교육)〉



〈안정된 삶(소득소비, 주거, 문화여가)〉



〈지역 자긍심(환경,공동체, 주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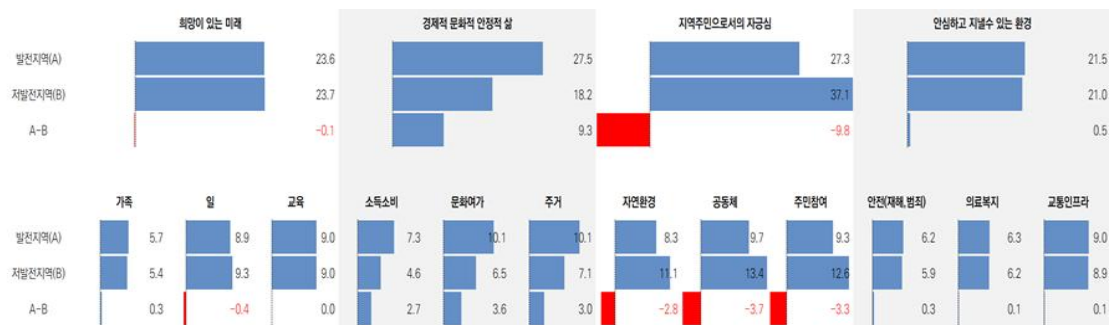


〈안심 환경(안전, 의료·복지, 교통인프라)〉

주) 저발전지역은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9개 시군)을 말하며, 발전지역은 그 외의 시군을 말함

행복에 미치는 중요하게 미치는 요인은 발전지역-안정적 삶, 저발전지역-지역주민 자긍심¹⁾

- 저발전지역의 가장 높은 가중치 : 지역주민 자긍심(37.1%)
- 발전지역 대비 저발전지역의 중요 요인 : 자연환경, 공동체, 주민참여
- 저발전지역 대비 발전지역의 중요 요인 : 소득·소비, 문화·여가, 주거
- 희망이 있는 미래 23.7%, 경제적문화적 안정적 삶 18.2%,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 37.1%,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21.0%



지역별 희망요인별 가중치(AHP)

1) 설문조사

- 조사 기간 : 2019년 12월
- 표본수 : 2,102명
- 표본추출 : 지역별, 연령대별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표본
- 신뢰구간 : 95%±2.9%

IV 제 2 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 1. 제 1 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검토 ... 31
- 2. 계획과제 34
- 3. 기조 및 방향 36
- 4. 기본 구상 37
- 5. 단계별 추진방안 41
- 6. 사업 지원 분야 43
- 7.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45

1.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검토

조례 주요내용

- 근거
 -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조례 제4조 제1항, 기본 및 개발 계획의 수립)
- 계획 기간
 -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개발계획(5년, 제4조 제2항)과의 혼선 발생
- 계획 수정
 - 5년 이내 범위에서 타당성 여부 재검토하여 정비

개요

-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장기종합계획, 전략계획
- 공간적 범위 : 8개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시간적 범위 : 2008-2020(13년간)
- 내용적 범위
 - 현황 및 개발여건, 대내외적 여건 전망, 개발방향 설정, 지원대상지역 방향 설정, 자원조달계획

기본방향 및 진단

- 임시 방편적 처방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 주민 활력 및 주민 통합 최우선 과제, 오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 통합
 - (실태) 시설중심 투입, 타 낙후지역 지원사업과 통합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지역사회 주도를 위한 간접지원 증시, 지속가능성 담보 및 지역 특화발전 지향
 - (실태) 외생적 발전, 현안사업, 시설사업 중심의 재정 투입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대응 소극적

- 지역별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및 특성화된 지역문화 육성
 - 인구 정착, 기반산업 육성, 향토자원 개발·육성
 - (실태) 제일 많은 재원 투입된 분야는 관광분야이며, 산업 육성측면은 시군별 특화분야에 투입하였으나, 마스터플랜 없이 현안사업 중심 추진으로 한계
- 균등개발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 도모 및 지역주민 의식변화 유도
 - 한정된 재원의 분산투자 보다는 전략적 집중 육성

⇒ 현장의 시군 자율사업에 대한 오해, 시군 현안사업 중심 추진, 공간적·내용적 사업 추진에 한계

목표 및 전략

- 과대 목표, 단계별 실현가능성 미흡, 타 관련사업·후속조치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 실효성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

구분	단기(2010)	중기(2015)	장기(2020)
목표	지역균형발전 추진	충남의 신성장축 구축	골고루 잘사는 강한 충남 구현
전략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및 개발거점 기반 마련 (충청남도내 북부지역과의 경제력 격차 최소화)	종합적인 지역개발 추진으로 사업시너지효과 창출 및 개발거점 구축 (사군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체계 구축)	개발거점간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로 코리도 조성 (균형발전대상지역을 관광산업의 메카로 건설)
추진 과제	• 신성장거점 육성 - 산업용지 공급 - 신성장기반 조성 • 역사문화관광지대 조성 - 부존자원의 개발 - 관광산업 육성 • 대규모 사업 기반 조성 - 미래에 대한 확신 - 지속적 기반 구축	• 산업용지 지속공급 추진 - 산업용지 지속 공급 - 신성장기반 전후방산업의 체계적 육성 • 대도시 근교형 영농·관광여가지대 조성 - 소득기반 확대 •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 교육, 문화, 복지 향상 • 살기좋은 도시 및 지역 만들기 -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및 지역만들기	• 신성장거점으로서 첨단산업 육성 - 생명산업 등 지역특성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육성 • 균형발전대상지역 관광벨트 조성 - 해양-내륙 연계교통망 구축 - 대중국, 아시아 교류거점으로 세계적 관광지 개발 • 삶의 질 향상 -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개선과제

- (방향성) 전체적 방향은 현재도 정합, 제도적 부분에서 개선 필요
 - 저발전 원인을 개선하고, 자립화, 특성화 등은 현재도 유효 ⇒ 실현 방법적 측면에는 개선 필요
 - 중앙정부 낙후지역개발사업 등과의 통합 추진은 개선 필요

- (수용성·대응성)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방향성 제시
 - 미래패러다임 적극 수용·대응하는 방향 설정은 정합
 - 산업, 도시개발, 관광, 주거, 삶의 질 등 전반을 계획
 - 계획 대비 수단적 측면의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용은 진행과정에서 일관성 유지 미흡

- (체계성) 국가균형발전, 충남도정과의 연계성 미흡, 하위·후속 체계의 재구성 요구
 - 국가, 충청남도의 상위·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및 차별성 미흡
 - HW중심의 계획, 민선 도정 여건변화 수용 등 계획 실현을 위한 방법적 측면의 수정, 보완 등 미시행
 - 균형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계획과제

(산업 육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내 수용태세 마련

- 불균형, 양극화 원인의 시발점인 산업화, 경제성장 미흡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략 산업 육성하고, 지역내 수용태세 마련이 필요
- 특히, 국가민간주도의 전략산업의 경우, 대부분 고차, 고임금, 고학력 인력의 경향을 보이고, 산업시설이 입지하더라도 공장자동화로 인한 지역내 인력수급 측면에서 지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그러나, 저발전지역은 근로자 수용 태세, 직주분리로 인한 지역내 안정적 정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됨
- 인력 공급, 고급 문화서비스 제공 미흡, 교통서비스 불편, 타 수위도시 대비 높은 지가 등으로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동인력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는 현상이 일반적임

(지역 경제) 지역산업 지탱분야에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기존 지역경제의 구조 현행화 및 조정

- 저발전지역내 수위중심지는 음식, 도소매업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산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지역내 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업 전환 노력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서비스업으로 이전하더라도, 폐업율이 높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온라인 E 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인하여 지역내 전통시장, 상점가는 매출액 감소 및 영업이익률 감소가 심각한 상황
- 농어업에 생산력, 판매 다양화, 서비스 질 개선 등의 체질개선 시급
- 저차 중심지,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어업은 고령화 및 인력공급의 외국 노동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경쟁력은 감소하여 대농과 소농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
- 한편,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농업외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로서, 농업 부문의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외부 영향에 민감한 관광서비스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급변하는 환경 적응 태세 마련 요구됨
- 관광은 외부 경제 및 환경에 매우 민감한 분야이고, 그 변화는 세계적, 전국적 수준의 흐름으로 지역내의 콘텐츠, 서비스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있음
- 한편, 음식서비스업의 형태가 고급화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고령화, 인식 변화 지체, 시설 개선 미흡 등으로 한계를 노정하는 상태

(서비스) 분절적 서비스를 인적·물적 서비스의 질적 개선

-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공급,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대비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시설 과잉공급 관리 필요
 - 복지 서비스 공급시설의 대부분은 전체적인 공급체계, 공급량의 전망과 계획 없이 국가에서 요구 사항을 집행하는 수준이며, 그 입지는 중복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한편, 일부 시설의 경우 결핍된 양상을 보임
 - 향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시대에는 서비스 공급의 축소가 예상되고, 경험에 의한 터널효과 후에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복지 대비 열악한 문화예술스포츠 서비스의 계획적 공급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 복합화
 - 복지대비 현장의 수요가 높은 분야가 문화예술스포츠 시설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은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 시설물을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잔재함
 - 이용자 동선,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시가지내에 입지하고, 기존 복지시설과의 연계, 복합화가 필요
- 미래 인구 감소 대비 정주체계별 적정 서비스 공급 체계 마련 필요
 - 비중심지의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중심지 체계별 적정 서비스의 복합화하는 등의 공급체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비중심지는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고, 최소서비스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인 의료·보건을 기본으로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달토록 고려

(역량)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충, 지역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네트워크화

- 인적역량 부족, 산업 생산성 부족, 자생적 발전 역량 부족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를 개방형 사회로의 전환
 - 외생적 발전에 의한 부작용으로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였지만, 지역내에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인 사업효과를 주변으로 파급하지 않고, 그 효과를 내부에만 국한시킨 폐쇄성임
 - 또한, 지역내의 연령별, 계층별로의 불신이 심화되고, 젊은층은 지역을 이탈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장노년층은 폐쇄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사람중심으로의 전환 및 사업 투자상 사람에 대한 투자를 선결 요건화 필요
 - 시설중심 사업의 부작용으로 주인없는 시설, 떠나는 지역이라는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관행적으로 추진을 사람 우선,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3. 기조 및 방향

조례에서 제시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목적하에
장소의 번영보다는 사람의 번영으로 전환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정착

균형발전의 개념 전환 : 기본적인 평등권을 보장하되, 경쟁력, 지역 가치 창출

- 지역 특성이 고려·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균등화 전략은 한계 봉착
- 지역사회의 공정한 삶 영위를 위한 평등권은 확보하고, 나아가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 가치 창출 제고

사전적인 기획의 보장 : 자율, 경쟁, 특성화, 혁신

- 과거 균형발전 정책은 불합리성에 대한 교정적 균형을 의미(결과의 균등)
- 자율적인 지역발전 역량 제고하고, 지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발전 추구

지역 포용사회를 위한 다분야 통합적 발전 도모 : 지역, 공유,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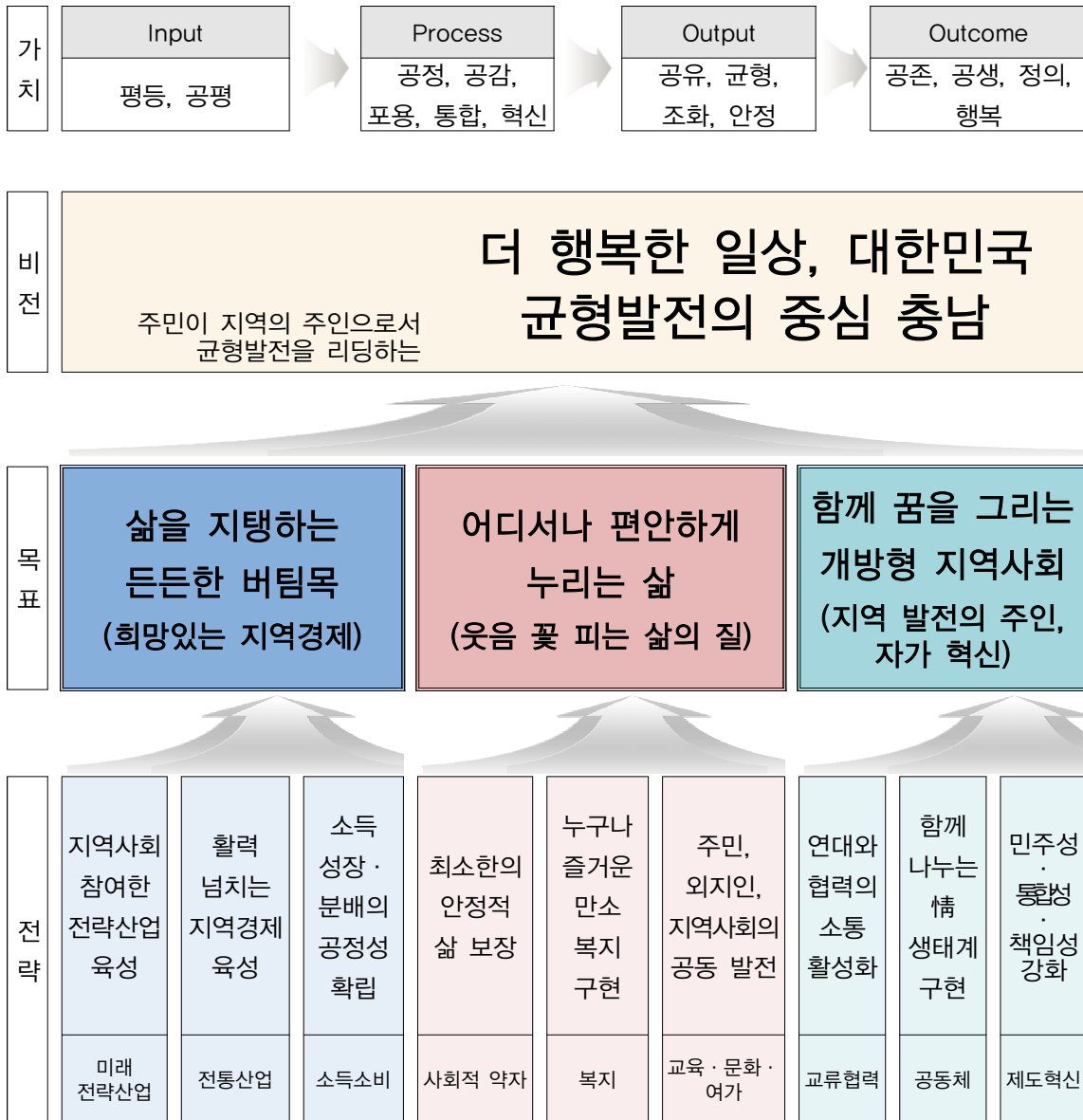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 제고
- 기초적 생활의 발전 토대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산업, 복지, 공동체 등 관련 분야간의 융합
- 배제에 의한 사회적 약자 발생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유시스템 구축

생산적·혁신적 지역 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 정착 : 연계, 연대, 융합, 복합

- 지역내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
- 공간간, 물자간, 사람간, 조직간의 연계·연대하여 경쟁력 및 자립 역량 제고

4. 기본 구상

1) 비전, 목표, 추진전략



2) 전략별 계획과제

(1) 내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전략	계획과제	중점 시책	비고
지역사회 참여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자산 기반 신산업 발굴·육성	○ 충청남도 상위 전략산업 계획과의 연동성 제고 ○ 지역기반 농축산·해양 바이오, 수산업, 해양레저산업 육성 ○ 미래기술 R&D투자와 연구개발 중심 투자환경 조성 ○ 디지털미디어아트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원 설립 및 혁신거점 조성 ○ 농어촌 지역 에너지 센터 설립·운영	연계· 통합
	다양한 일자리 환경 조성	○ AI, 3D 프린팅 등 신기술·신산업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 창출·테스트·상용화 위한 지역산업문화 기반 조성 ○ 글로벌화를 위한 FTA 자격증의 MRA(상호인정) 추진 ○ 충남 경제 진흥원, 충남 도시민정협의회, 충남 고용네트워크 서비스를 원스톱 통합 지원 ○ SW기반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하여 디지털 콘텐츠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연계· 통합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강화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충남 일자리 진흥원과 연동한 기업과 학교 간 MOU체결 및 취업프로그램 연동 ○ 신규 직무, 새로운 사업기회 대응한 직무 발굴, 현장 요구형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Maker 육성을 위한 창업 및 투자, 마케팅 등의 멘토링 및 창업보육 공간 육성 ○ AI, 자동화 등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의 일자리 지원 ○ 충남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중고 실업계 학제 도입 운영 ○ 외국계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학교육 운영	연계· 통합
활력 넘치는 지역경 제 육성	미래 대응 농어업 현행화 및 농외소득 확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농 육성 ○ 중소가족농의 소득안전망 확충 ○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농업의 스마트화 ○ 사회적 경제, 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농촌경제의 다각화	연계· 통합
	서비스업 체질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소상공인 등 지역단위의 공동체 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과 상권 조성 ○ 중소유통, 영세독립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전략 마련 및 유통업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전자상거래 지원 센터 설립 및 기능 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육성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 하우스 푸어,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금융 배제 극복, 과도한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상시 채무 재조정,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연계· 통합
	함께하는 공동체 기반 BiZ육성	○ 지역특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영리형, 비영리형, 도시형, 농촌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모델 개발 ○ 지역내 혁신기관, 산학연관, 대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모델을 도출 및 실감 콘텐츠 인재 육성	선도
소득 성장· 분배의 공정성 확립	근로소득으로의 소득중심점 이동	○ 빈곤의 대물림 구조화·고착화 방지를 위한 최하위 소득계층의 인적자원개발 ○ 소득불평등, 비정규직 고용 확대에 대응한 신규 일자리, 교육·훈련 등 원스톱 서비스 ○ 모기지 부채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 ○ 수도권 집중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충남도 북부권 집중 자산에 대한 재산 소득을 낙후지역으로 재분배 유도, 건의	연계· 통합 건의
	공유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 지역의 자산과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사회-경제 결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참여 공유경제플랫폼 조성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와 공유경제를 결합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유경제(협업형)' 모델 구축	신규
	가계소비 지출의 효율화	○ 소득 감소·빈곤 유발의 주요 원인인 실직, 건강 악화, 출산, 은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안 마련 ○ 노동과 돌봄을 병행토록 업무 방식, 근로시간제도 개선 ○ 고정 지출 경비 저감을 위한 에너지 인센티브사업 마련 및 지원	연계· 통합

(2) 어디서나 편안하게 누리는 삶

전략	계획과제	중점 시책	비고
최소한의 안정적 삶 보장	취약 계층 보호 및 서비스 집중 공급	○ 균형발전지역 서비스 권역 설정 및 복지격차 해소방안 마련 충남도 차원 마련 ○ 안정적인 노인 노후소득 보전(일자리, 민간영역 연계, 고령친화사업, 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 구축(공동생활시설, 노인 돌봄, 건강관리 시스템, 응급안전, 주거 안정 등) ○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가활도탈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사회복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 법제도적 사각지대 축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공식 가사사용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인센티브 제공	연계·통합
	지역사회 존속 위협요인 해소	○ 임신, 출산, 응급의료 등 기본시설 구축·운영 및 의료 인력지원 ○ 단순·숙련인력을 동시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추진(예, 일본 입국관리법 개정) ○ 유희·방치 건축물의 철거·녹지화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공동거주시설 보급 ○ 과소지역(한계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중심 도농간 교류 확대 ○ 농산어촌 이주·정착 지원 코디네이터 육성 및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연계·통합 신규
	잠재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보전	○ 저소득층 자녀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대 및 기회 보장 ○ 실업 급여 소득지원 등의 사후 지원 위주 소극적 노동정책에서 교육훈련과 직업중개 등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고령자 고용 정책의 다양화 및 확대(정년 연장, 공적 연금 수급 개시연령 인상, 고용확보 조치 등) ○ 여성 가구주 실직에 대응한 인센티브 부여	연계·통합
누구나 즐거운 만족 지 구현	미관심계층의 사회참여 다양화 및 확대	○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 ○ 이주민 시민역량과 주민 다문화 친화력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운영 ○ 다양성 존중 사회,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내실화	연계·통합
	수요대응 프로그램의 확충 및 통합적 전달서비스 추진	○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선진화 ○ 과학기술 활용 평생 건강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심시스템 구축·운영 ○ 방문 출산·육아서비스와 지역거점 보육시설 조성·운영 통합화	연계·통합 신규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복지 체계 마련	○ 의료, 재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합 커뮤니티 케어 모델 제공(노인) ○ 지역 공동체 주도의 마을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경제 조직화 ○ 학생의 건전한 사회 활동 지원(키즈타운, 방과후 학습과 도서관 연계, 체험 활동 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가정 육성(여성정책 네트워크, 취업, 가정, 결혼이민자 등) ○ 지역사회기반 자원봉사 영역 확대(조직, 문화, 학생자원봉사, 재해예방, 안전 문화도시 등)	연계·통합
주민, 외지인, 지역 사회의 공동 발전	평생교육 내실화 및 생애주기별 교육 혁신	○ 중앙-권역-읍면동-주민센터 등 평생학습시설 인프라 구축 ○ 관내 박물관, 전시관 등의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기관 조성 및 운영 ○ 개인 행복에 대한 내선 가치 확장을 위한 인문학 콘텐츠 발굴 육성 및 NGO활성화, 보급 프로그램 운영 ○ 여성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 ○ 이주민 불평등과 소외현상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내실화	연계·통합
	지역자산기반 민간·콘텐츠 융합	○ 세계문화유산, 지역내 정신문화,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융복합 문화 콘텐츠화 ○ 주민 주도의 경쟁력있는 공동 관광상품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 지역내 혁신기관, 산학연관, 대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모델을 도출 및 실감 콘텐츠 인재 육성 ○ 4차 산업혁명 연계된 ICBM+인공지능기술을 접목 및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연계·통합
	지속가능한 공유문화 창출	○ 지역내 역사작산업적 유산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예술기반의 문화도시로 확대하여 도시 관광화 ○ 지역이 보존해야할 한정된 공유자원을 관리, 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 추진	연계·통합

(3) 함께 꿈을 그리는 개방형 지역사회

전략	계획과제	중점 시책	비고
연대와 협력의 소통 활성화	공동체적 유대와 협력가치 강화	- 다문화정책, 도시·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합적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학교 운영 확대 '동네발전기획' (NDP; Neighborhood Development Planning)차원의 마을 발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들 간 이해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소통·공감과 합의 기반을 통해 원칙과 규칙, 규약 등을 규정, 준수 유도	연계·통합
	지역내외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확대	- 관광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지자체간 협력체 구성 운영 - 지역별 특성을 특화하되, 환경과 문화적 접근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 단순노동 인력, 숙련인력과 우수외국인을 적극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책 총괄기관을 신설·운영	연계·통합 신규
	초연결사회 통합 마케팅	- SNS의 무한 확장에 대응한 다양한 여행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보급 - 모바일 심화, 투어가이드로서 모바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융합산업 창출	신규
함께 나누는 情 생태계 구현	공동체 활동 플랫폼 구축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ICT융합연구그룹 운영 - 커뮤니티 비즈니스 통합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지역 통합 플랫폼 구축(농업, 식품, 문화, 복지, 도시, 관광 등)	신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적자원 육성	- 마을, 공동체, 여가, 문화, 스포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 도입 운영 - 유아기 인적, 사회적, 정체성 자본 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 보완 및 교원 전문성 강화 - 학교교육과정 유연화-개방화 대응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 학점제 확대 시행 -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육 다중성 인정한 미래 경쟁력 확보 - 학교밖 청소년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기반 및 활동 지원	연계·통합
	스스로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 공동 의제 성립 및 실현수단으로서의 마을, 농촌, 도시재생의 통합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본의 클라우딩 기법 적용 확대 - 아름답고, 쾌적한 주민주도형 가꾸기 사업의 추진	연계·통합
민주성·통합성·책임성 강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일상화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IT기기 등의 활용하여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유도 - 일반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정비 및 체계화 - 청소년 대상 교육을 강화 및 후세대 양성에 적극 추진 - 의견제시, 청취 등의 형식적 참여가 아닌 일부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함	연계·통합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마을 기획부터 경영까지 통합추진을 위한 전문가 영입 추진 - 지역 현실에 맞는 중간지원 조직 통합화 및 재단화(시군)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공동체, 농업 등	신규
	시민화 및 사회적 책임제 시행	- 빅데이터 기반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공공-주민 간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 행정중심적인 업무수행방식에서 탈피한 민간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협치 구조 마련 - 사회적 가치 측정, 시민 교육, 정책 모니터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공의 사회적 책임제 시행	신규

5. 단계별 추진방안

- 시군 공무원·시설 중심, 사업부서 개별 추진, 현안·외부 영역 형태로는 권능화 (Empowerment)한계
- 충남도 역할 대폭 강화(충남도 직접 사업, 연계협력사업 등) ↔ 시군 행정 역할 축소 ↔ 전문가·민간 조직·주민 역할 확대 절실
- 추진방법 : 先) 추진 조직, SW 구성 後) 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전환

(기반 구축) 실태 분석, 연계사업 진단 및 적합성 검토, 제도 기반 마련, 거버넌스 구축

- 기초 자료 구축 및 연구(충남 주도) : 불균형, 양극화 관련 원인 해소를 위한 분야별, 주체별 실태 조사
 - 기본 현황, 소득, 자본, 매출, 조직, 유희 토지·시설 등 Micro data 구축 및 실태 조사
 - 중앙부처 통계 원시 자료 협조 체제 구축
 - 지역내 관련 추진 조직, 참여 가능 조직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관련 연계사업 진단, 적합성 검토, 미션 설정(충남, 시·군 공동 추진) : 산업, 삶의 질 분야 다분야 사업 진단
 - 분야별 법정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충남 전략산업, 국가 건의 사업, 낙후지역 지원사업 진단 등 연계사업 진단 및 충남도, 시·군의 역할 정립 및 미션 설정
-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학·연 거버넌스 예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시·군 주도, 충남 지원)
 - 사업별 민간 참여자, PM 예비 구성
 - 시군 균형발전 지원 조례, 사업 추진·운영조례 제정
- 투자 협약(충남도-시군간), 사회적 책임제(시군 행정-기업, 민간 기관, 주민간) 약속(충남도-시군 주도, 기업·민간 기관·주민 참여)
 - 과정, 성과 체계 마련, 공정표 작성, 기관·주체간 약속 이행 협약
 - 행정에 의한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의 집단지성에 의한 사회적 책임제로 전환

(사업 추진) 민관 통합 추진(운영)체, 역량강화, 서비스 T·B, 시범 운영

- 민관통합 운영체 구축(시·군·주도, 충남 지원)
 - 사업별·추진 주체별 협의체-추진체 구성 및 통합 추진체 운영
 - 현)시군 통합 협의체 설정 매우 미흡 → 각 대표 주체의 의사결정조직으로 전환(부단체장 산하, 총괄부서 주도)
- 민간의 조직화 · 외부(관외)와의 교류 협력 정례화로 개방성 확대 및 사업 주체별 역량강화(전문가·민간 주도, 시군 행정 지원)
 - 기존 조직 역량 진단, 신규 참여자 모집, 최종 운영 조직 형태별 심화·전문 역량강화 집중
 - 시·군을 벗어나 타 시·군, 충남도, 전국 대상 개별 주체의 관심 집단간 학습, 교류·협력 정례화로 민간 집단의 개방성 확대
- 경영·서비스·운영·시설 조성 등 T·B, 시범운영(민간 주도, 시군 행정지원, 충남도 점검·평가)
 - 시설물 조성 전, 운영 조직 최종 구성 前 시범운영, BIZ·T·B 및 Feed-Back
 - 사업 추진에 대한 상시 점검 및 과정 평가(민간, 충남도 시행)
 - ※ 분기별 점검, 연차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운영 및 성과 창출) 운영원칙 제도화, 사업 과정·결과 투명하게 민간 공개, 성과 모니터링·평가

- (운영원칙 제도화) 공정성의 원리·사회 투명성에 근거한 선순환형 플랫폼 구축, 사업 운영(시군 민간 주도, 행정 지원)
 - 불편함 극복, 이익 공유를 지향하며, 기회의 공정성, 경쟁의 공정성,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운영의 제도화
 - 공공은 촉매제·기폭제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지역내 민간과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플랫폼 구축²⁾ 및 운영(민간 퍼주기식 지양)
- (성과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수익은 적더라도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사업 종료 후까지 모니터링·평가 시행(시군 민간주도, 행정지원)
 - 모니터링, 평가를 기반으로 균형발전지표, 기본계획, 개발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Feed-Back
 - 투자협약제, 사회적 책임제의 약속에 대한 지속가능성(SDGs)³⁾, CSR⁴⁾·CSV⁵⁾ 측면의 성과 평가(일명, 균형발전사업 영향 평가)

2) 전자 산업 대비 4차 산업(디지털)산업의 속성(한계 생산비, 운영 비용 증가, 고용 증가 = "0(Zero)"), 이용자 연결(Network)에 따른 부의 집중) 극복

3)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 목표) UN과 국제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며, 인간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시함,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에 대해 미래 비즈니스 기회 파악, 기업 지속가능성 가치 강화, 정책발전과의 속도 유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사회-시장 안정화 도모

4)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핵심 가치이고, 기업시민, 자선, 지속가능성이 핵심 개념으로, 동기는 재량적·외부압력에 대응

5)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는 비용 대비 경제적 가치·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 핵심 개념은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공동 가치창출이며, 동기는 경쟁력 확보

6. 사업 지원 분야

1) 산업·경제분야

산업·업종간 양극화 해소 : 지탱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통합 추진

- 농어업, 소매업 업종별, 산업별 생산성 제고 및 고용규모 확대
- 경영내실화, 판매 경로 확보·지원, 2차산업화 등 융복합화
- 소상공인 재취업 및 신규 창업활동을 통합 지원(자금, 정보, 교육·컨설팅, 네트워크 등)

소득·고용 격차 해소 : 임금, 고용형태의 근로 빈곤계층 저감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조체제 마련 지원

- 근로 계층별 절대 빈곤률 탈피를 견인하고, 실질 소득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다양화
-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긴밀하게 연계된 분야의 안정성·경쟁력 제고
- 부처별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통합 지원
- 기존 사업체의 규모화, 경쟁력 강화(영업이익률 확대)§개인의 가처분 소득 제고 등 소득 증대방안

혁신기반 마련 : 인적자원 역량 및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 미래 장기 전략산업의 투자를 조기 시행하기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지역내 기업의 R&D, 인적자원의 교육·훈련등에 투자 제고
- 교육비 지출·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2) 삶의 질 분야

삶의질 관련 지표 관련 지속 사업 발굴 및 추진

생활SOC와 연계한 시군내 각종 프로그램 연동, 전달서비스 효율화

- 공급자 중심 시설 과잉 분절 공급 지양
- 생활SOC와 연계한 운영·관리 효율화 및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 개별시설, 소외지역 운영 프로그램 통합화(One Stop Service, One Way Multi Use)

3) 충남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미래 전략계획·사업과 연계 추진

- 충남도에서 수립한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와 연계된 사업

4차산업혁명 대응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지역자원 활용형 융합 신산업, 스마트 전환 및 다양화
-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포용과 상생환경 조성

- 일자리와 소득중심의 포용과 상생환경 조성(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서해안 중심산업·교통·물류·배후지원 기능 강화

-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벨트 구축
- 국제·국가·광역 차원의 지역발전 기능 확충

7.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충남 균형발전지표에 의하면 9개 시군은 3개 그룹핑 가능

- 충남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지표에 의한 총점 도출시 3개의 그룹화 가능
 - 제1그룹 : 논산시, 공주시
 - 제2그룹 : 예산군, 금산군, 보령시
 - 제3그룹 : 서천군,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

충남 균형발전지표에 의한 지원대상지역 순위

순위	7	8	9	10	11	12	13	14	15
시군	논산시	공주시	예산군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
표준화 점수	-1.81	-1.96	-4.12	-4.43	-5.27	-7.54	-8.5	-8.73	-10.62

향후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간 인구 격차는 지속 심화하고, 저발전지역 존립 위협 수준

-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지만, 저발전지역의 인구는 지속 감소(-1.78%)
- 고령화 지수 : 저발전 지역 심각§출생아수, 인구부양비 등은 저발전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2030년 이후)
 - 충남 23.2%(2030) → 28.9%(2040), 발전지역 21.5%(2030) → 28.8%(2040), 저발전지역 38.8%(2030) → 47.1%(2040)
 - 저발전지역 유소년 증가율 -3.24%, 생산가능인구 -3.21%
 - 저발전지역 인구 부양비 87.4%(2030) → 117.4%(2040)

발전지역, 저발전지역 인구추계(2040)

구분	인구수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출생아수			(단위:천명,%)		
																인구부양비		
	충남	발전 지역	저발전 지역	충남	발전 지역	저발전 지역	충남	발전 지역	저발전 지역	충남	발전 지역	저발전 지역	충남	발전 지역	저발전 지역	충남	발전 지역	저발전 지역
2025	2,274	1,644	630	298	244	54	1,516	1,146	371	459	254	205	92	74	16	50.0	50.1	73.4
2030	2,343	1,762	582	295	249	43	1,505	1,187	318	544	326	218	90	74	16	55.7	54.2	87.4
2035	2,405	1,873	532	288	248	40	1,489	1,219	271	627	406	221	89	75	14	61.4	61.3	101.7
2040	2,451	1,972	479	279	246	33	1,464	1,137	227	708	490	218	86	74	13	67.5	69.7	117.4
증가율	0.54	0.55	-1.78	-0.33	-0.72	-3.24	-0.17	-0.83	-3.21	3.04	3.87	0.64	-0.36	-0.69	-2.73	2.00	2.24	3.25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 2040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2016

시군 지탱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쇠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

- 농산어촌지역의 지탱산업인 농림어업분야의 GRDP는 지속 감소 추세
 - 공주시 -0.45, 논산시 -2.37, 금산군 -1.58, 서천군 -4.18, 태안군 -0.78
- 제조업은 증가하는 반면 태안군만 감소세
 - 도소매업은 서천군이 유일하게 감소
 - 숙박음식업은 공주시 -2.17, 금산군 -0.22, 태안군 -0.60으로 감소세
- 공공의 자원 투입이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서비스업은 지속 증가세이며, 서천군, 청양군은 월등
 - 서천군 10.17, 청양군 11.95

경제활동별 충남도, 시군별 GRDP 증감량, 증감률(2010-2016, 2010 기준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역내 총생산	순생산 물세	총부가 가치	농림 어업	제조업	도매및 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 업	문화및 기타서 비스업
충남	증감량	28,120,624	4,240,033	23,958,448	148,525	14,819,942	785,935	208,962	407,248	497,415	863,907	323,402
	증감률	4.97	6.98	4.75	0.67	5.35	5.17	2.99	2.61	2.49	7.76	3.79
공주시	증감량	289,998	55,451	66,041	-6,371	196,993	21,713	-8,280	-172,595	-18,649	25,042	3,987
	증감률	1.58	4.32	0.40	-0.45	5.34	2.94	-2.17	-10.15	-1.51	3.34	0.79
보령시	증감량	470,183	76,616	393,568	25,293	66,488	29,375	23,946	-3,521	-3,632	26,572	22,603
	증감률	2.80	6.61	2.51	1.94	3.36	4.61	5.81	-1.38	-0.46	5.20	5.89
논산시	증감량	357,712	56,697	301,015	-54,151	170,994	38,812	2,091	23,925	-12,352	52,703	34,737
	증감률	2.08	4.45	1.89	-2.37	4.44	4.57	0.77	5.39	-0.92	5.95	7.45
금산군	증감량	263,688	37,962	225,727	-9,120	94,839	37,473	-339	-5,089	7,230	13,884	18,815
	증감률	2.58	4.17	2.43	-1.58	2.26	12.06	-0.22	-2.08	1.80	4.97	7.67
부여군	증감량	77,996	1,291	76,705	47,238	35,513	8,325	4,200	-9,523	2,955	15,984	9,560
	증감률	0.81	0.18	0.86	2.66	2.44	2.10	2.86	-4.23	0.51	4.11	4.11
서천군	증감량	197,671	17,298	180,374	-50,042	15,404	-1,798	890	187,171	-10,492	19,734	15,617
	증감률	2.02	2.36	1.99	-4.18	0.61	-0.67	0.75	41.89	-1.91	5.51	10.17
청양군	증감량	172,032	23,237	148,794	3,088	67,835	7,596	2,542	11,525	-2,032	7,804	13,044
	증감률	3.64	6.66	3.40	0.41	6.03	6.84	4.29	6.34	-0.74	5.17	11.95
예산군	증감량	762,465	101,961	660,504	38,457	338,760	29,162	7,291	13,107	-17,368	11,054	29,841
	증감률	5.83	10.65	5.45	2.28	9.02	6.12	2.88	7.92	-2.07	2.97	9.80
태안군	증감량	237,727	25,650	212,077	-10,012	-9,504	23,243	-2,268	18,685	-2,646	21,958	16,702
	증감률	2.19	4.04	2.08	-0.78	-6.42	6.93	-0.60	4.77	-0.54	8.12	7.44

자료 : 통계청, 시군별 GRDP, 각년도

2) 관련 지표 종합 및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산업, 경제분야는 지속적 쇠퇴하여 시급한 개선 요구

- 저발전지역의 지탱산업이라 할수 있는 농어업분야, 도소매업은 지속 쇠퇴
 - 농어업분야 심각 시군 :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 도소매업 심각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은 매우 심각한 수준
 - 제조업 심각 시군 :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 전산업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서 자립화 요구
 - 지역내 경제의 악순환이 되어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시군 : 부여군, 서천군
- 관광분야와 직간접적 영향력이 있는숙박 음식업은 기존 관광수용태세 개선 필요
 - 숙박음식업 심각 시군 : 공주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 지역내 불평등도가 심각한 시군은 소득 양극화에 진입하여 개선 필요
 - 월평균 근로소득 지니계수 심각 시군 :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복지서비스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좋으며, 문화서비스의 경우 일부 시군, 특정분야에 개선 필요

- 문화서비스 성장 심각 시군 : 공주시, 보령시(교육서비스)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분야는 산업경제분야이며, 삶의 질 관련 분야는 시설투입 보다는 서비스의 고급화,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요구됨

- 산업경제분야의 중점 과제는 우선 지역사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급격히 쇠퇴하는 분야에 대한 현행화와 개선이 요구됨
 - 특히, 향후 고령화율 증가, 인구 부양률 증가에 의해 지역 경제 쇠퇴와 더불어 주민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존폐 위기 감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삶의질 관련 분야는 부족한 서비스는 공급하되, 인구 감소추세 대비 프로그램의 다양화, 적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질적 개선 및 체계화가 요구됨
 - 저발전지역일수록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장에서는 미래 인구 감소 대비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는 미인식 상태
 -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달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여 소비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제고가 요구됨

(공통)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 지탱산업 지속 육성, 기존 제조업체 체질개선, 신산업 적극 육성, 전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분야간 연계·융합·통합 추진(SW·추진체계 중요)

- 시군간 연계·협력 요구되는 분야는 충남도 직접 사업 추진

1차산업 중심 지역의 구조적 저발전지역의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

- 부여
 - ① 전략적 농산업(굿뜨레) 고부가가치화 + 신전략산업 → 자립 성장 유도
- 서천
 - ① 농수산업 진흥, ②도소매업 특성화, ③ 연관 제조업 유치
- 청양
 - ① 농림업 고부가가치화 + 신전략산업 → 식품산업 적극 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
- 태안
 - ①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② 제조업 유치, ③ 음식숙박업 체질 개선 → 수산업 진흥 및 경제 순환체제 구축

기존산업의 고도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 보령, 금산, 공주, 논산

- 보령
 - ① 농수산업 진흥, ② 제조업 전략적 유치·개선 → 산업단지 지원, 신산업 육성
- 금산
 - ① 전략 농산업(인삼,약초,갯잎등) 고부가가치화 ② 숙박음식업 체질개선 → 특화산업 고부가가치화
- 공주
 - ① 특화농산업 육성, ② 숙박음식업 체질개선, ③ 제조업 구조 개선 → 지역내 순환체제 구축
- 논산
 - ① 특화농산업 고부가가치화 → 농산업 고부가가치화
- 예산
 - ① 특화농산업 고부가가치화 → 농산업 고부가가치화

시군별 중점고려사항 및 지원 우선순위

구분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인구 (부양비 기준)					심각 (82.7)	매우 심각 (102.6)	매우 심각 (101.1)	매우 심각 (1044.1)	심각 (86.3)	심각 (86.0)
GRDP 성장률 (평균대비)		매우 심각 (-2.18)	심각 (-0.96)	심각 (-1.68)	심각 (-1.18)	매우 심각 (-2.95)	심각 (-1.74)	심각 (-0.12)	양호 (2.07)	심각 (-1.57)
보조금의존도 (평균대비)						매우 심각 (-5.83)	매우 심각 (-3.65)		양호 (4.64)	
1인당 GRDP		보통 (3,095)	높음 (3,681)	낮음 (2,567)	보통 (3,588)	낮음 (2,442)	보통 (3,379)	낮음 (2,886)	보통 (3,443)	높음 (4,033)
농어업 (평균대비)		심각 (-0.97)	양호 (1.42)	매우 심각 (-2.89)	심각 (-2.1)	양호 (2.14)	매우 심각 (-4.7)		양호 (1.76)	심각 (-0.78)
제조업 (평균대비)		양호 (0.31)	심각 (-1.67)	심각 (-0.59)	매우 심각 (-2.77)	매우 심각 (-2.59)	매우 심각 (-4.42)			매우 심각 (-11.45)
도소매업 (평균대비)		심각 (-2.72)	심각 (-1.05)		매우 좋음	심각 (-3.56)	매우 심각 (-6.33)			
숙박음식업 (평균대비)		심각 (-2.17)	매우 좋음 (4.14)		심각 (-1.89)		심각 (-0.92)			매우 심각 (-2.27)
월평균 근로소득		심각 (214.6)	보통 (253.6)	심각 (222.9)	매우 심각 (189.3)	심각 (215.2)	심각 (225.1)	심각 (206.6)	심각 (220.4)	심각 (226.1)
지니계수			매우 심각 (0.329)			심각 (0.303)	매우 심각 (0.340)			매우 심각 (0.329)
문화 서비스 (성장률기준)		심각 (-0.79)	심각 (교육서비스)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보통
복지서비스 (성장률기준)		보통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보통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보통	매우 좋음
중점고려사항		경제규모 제고	주민생활제 고	근로소득 제고	근로소득 제고	전산업 규모화 및 자립화 근로 소득개선	전산업 규모화 및 자립화 근로 소득개선	인구 유입	교육사회복 지서비스업 투자	제조업, 숙박음식업 쇠퇴 방지
우 선 순 위	1순위	도소매업	제조업 (Scale-Start)	농업 체질개선	제조업 업종 개선전환	제조업 유치 (성장동력 화)	도소매업 규모화 (군산시 대응)	특화작목 고품질화	복지서비스 통합거점 (교육 중심)	제조업 유치 (태안기업 도시)
	2순 위	음식업	시가자소재 지 주민대상 양질 일자리(서 비스업)	제조업 쇠퇴 개선 (국방산단)	농업 소득 개선	도소매업 서비스제고	농업 생산성 및 체질개선	농업인 부농화	SW전달서 비스 효율화	숙박음식업 서비스 개선
	3순 위		교육서비스 업			농업 자립화	제조업 유치 (성장동력 화)			농업 규모화
삶의질			SW전달서 비스 효율화 (HW지양)	SW전달서 비스 효율화 (HW지양)	SW전달서 비스 효율화 (HW지양)		SW전달서 비스 효율화 (HW지양)	SW전달서 비스 효율화 (HW지양)		문화서비스· 시설 개선

V

제 2 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 1. 계획수립 체계 개선 53
- 2.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개선 54
- 3. 모니터링, 평가 등 단계별 사업 관리 구체화 ... 55
- 4. 충남도 역할 강화 56
- 5. 모니터링, 평가, 추진체계 개선 57

1. 계획수립 체계 개선

기본계획 : 충남도차원에서 방향, 목표, 전략, 시군 사업추진 방향 설정

- 충남도 차원의 방향, 목표, 전략 제시 → 도 종합발전계획, 각 분야별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충남도의 도달가능한 성과목표 제시 : 개발계획과 상호 연계
- 시군 개발계획의 지침 역할 수행

개발계획 : 제안서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설계·추진 전단계

- 방향 등 기본 구상(목표-추진전략 등)을 정립(시군별)
- 성과목표 : 측정가능하고, 도달가능한 성과목표 제시(도, 시군별)
- 사업추진의 수요, 타당성에 근거한 사업계획 제시(일정 규모이상 투융자 심사 기 시행 후 반영)
 - HW계획 :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요구조건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시행방법 제시
 - SW계획 : 사업내용, 주체, 프로세스 등을 제시(시행계획 수립시 지침 활용)

시행계획 : 세부사업(내역사업)의 설계·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집행가능한 계획

- 시설계획 :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공정별·공종별·내역별 세부사항 계획
- SW 계획 : 사업대상, 주체, 프로세스, 추진방식, 시행방법 등을 계획

2.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개선

3개 사업유형(도 제안사업, 시군 경쟁공모사업, 시군 자율사업)의 사업내용 다양화 및 충남도 역할 강화

- 현재 도 제안사업, 시군 경쟁공모사업에 대한 도, 시군의 참여도, 인식도 부족 개선을 위해 충남도 역할 강화 필요
 - 도 제안사업 : 충청남도 전략산업, 시군 연계협력분야
 - 시군 경쟁공모사업 : 시군에 한정된 특화산업 발전 사업 중심
 - 시군 자율사업 : 산업, 경제분야, 삶의 질 분야에 한정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역으로 한정
- 추가·보완 사업 : 충남도 전략산업 보완·연계사업, 지역간 협력·협력사업, 다양한 부처 혼합사업, 광역차원의 접근성 및 전달서비스 강화사업 등

구분	내용	비고
국가	◦ 국민통합 차원의 가치를 지닌 사업 ◦ 전국 차원의 포용적 정책 ◦ National Minimum 강화 차원의 정책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실현 사업	◦ 낙후지역, 섬 및 포용지역 지원 ◦ 전국 차원의 형평성 강화 - 지역간 균형발전
광역(충남)	◦ 충남도 전략산업 보완·연계사업 ◦ 도 차원의 삶의 질 향상 및 형평성 강화 - 기본적 삶의 질 및 공동체 유지 ◦ 지역간 협력사업, 다양한 부처 혼합사업 ◦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도 및 시군 차원) - 도차원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사업 ◦ 광역차원의 접근성 및 전달 서비스 강화	◦ 중앙정부 시책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 ◦ 도내 광역적 지역발전 ◦ 시군사업과 차별성 강화 - 시범사업→전국화 도모 ◦ 병원 및 소방등 기본 생존권 위협 해소 사업

3. 모니터링, 평가 등 단계별 사업 관리 구체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업무가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중앙집권에서 벗어난 충남의 자율성 강화
- 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 지역균형발전정책추진의 전문적인 사무 지원 필요
- 충남도청과 시군간 제반 사무를 지원하는 가교역할 수행 조직 설치 필요

위원회 지원 및 계획·사업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검토 필요

- 현재) 개발계획의 공정률(사업비 투입률) 중심의 모니터링, 평가 시행에 대한 개선
- 연구전담팀 및 센터·협력단 운영 지자체 :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 역할 : 시군별 실태 조사 및 연구
 - 경기도 : 북부연구센터, 시군연구센터(기관 규정)
 - 충청북도, 제주도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조례)
-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컨설팅
-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DB구축
- 각종 사업 평가 시행
- 시군 시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제공
- 지표 개발 및 보완 적용 지원
- 연구회 및 세미나 운영 등

4. 충남도 역할 강화

시군 일임, 집행을 중심의 관리 형태에서 성과창출을 위한 상시 환류체계 운영

- 충청남도 차원의 제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도, 시군간 협약 체결(투자협약제, 사회적 책임제)
- 사업 유형 다양화에 대한 도(관련부서), 시군(총괄부서, 사업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현장중심·컨설팅 중심의 워크숍·포럼 추진
- 성과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시행(일명, 균형발전사업 영향 평가)
 - 공공주도사업에서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추진체계 정립
 - 시군의 인재 풀(Pool)이 두텁지 않음에 따른 인재발굴, 역량강화 강화(역량강화사업 전제하의 시설사업 추진)

제2단계 제2기 사업 준비 : 역량강화 및 미래사업 발굴

- 불균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분야별·주체별 실태 조사
- 법정 계획, 분야별 기본계획등을 검토, 균형발전사업 연계성 검토→ 도 직접사업, 시군 연계협력사업, 전략산업 사업 강화
- 거버넌스와 인재·조직 육성에 장기간 소요를 감안한 사전 역량강화 교육, 관심 집단간 학습, 교류·협력 정례화 시행
- 실질 추진주체인 시군의 역량강화 추진(우수사례 탐방, 전문가 강의, 컨설팅 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4차 산업혁명 대응 플랫폼 사업, 공유경제, 전략산업 등 미래산업·사업을 적극적·단계적 발굴

5. 모니터링, 평가, 추진체계 개선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충남형 투자협약제 시행⁶⁾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행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 체결 절차, 이행, 변경, 해약, 지원 등에 적용
- 기본 원칙
 - 자율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균형발전 계획 또는 사업이며,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전략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은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사업으로 함
 - 구체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업규모, 투자비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방법,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함
- 협약대상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여야 함
 -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일 것
 - 복수의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일 것
 - 지역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사업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3~5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 것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일 것
 - 사업주체가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사업, 토지 확보 등 사전절차가 원만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 관리·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일 것
- 협약 이행
 -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시 적용되는 다음의 관련

6)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참조, 2019.11.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9-631호 참조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법 제44조에 따른 적용배제 사항은 제외)

• 협약 이행상황 점검

- 투자협약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협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지자체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부서 및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는 협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관계부서 및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협약에 대한 지원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와 간사부서(균형발전담당관)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조정 또는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지자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협약사업의 추진에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투자협약 사업 관련 컨설팅 총괄
- 투자협약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 투자협약 사업성과 평가
- 투자협약 관련 제도개선 연구
- 그 밖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가칭) 지역발전연구·지원센터 기능 대폭 강화

-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도 차원의 균형발전 논리를 위한 역할 부재 및 자치분권과 결합된 충남만의 균형발전 정책 마련
 - 자치분권과 연계된 유사사업의 복합화
 - 관련 계획과 연계한 충남 균형발전사업 시즌 2 마련

제2단계 제1기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대응한 컨설팅, 점검, 평가의 효율적 수행 필요

- 제2단계 제1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시 현재의 시군 일임 형태로는 제1단계 사업 한계 봉착 우려
-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사업의 컨설팅 기능과 더불어 점검, 평가를 객관적 수행 필요
 - 또한,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군별 혁신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사업 홍보 부문 등의 전문성 강화 필요

제2단계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역할 강화

- 연구기능의 강화
 - 제2단계 제2기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정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시·군별 사업발굴시 원활한 사전이행절차 대응 연구·자문기능 요구
 - 사업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한 관련 성과목표의 확립 및 지속적 연구 추진
- 시군 민간영역의 혁신역량강화사업
 - 현재의 시군의 사업부서별 분파적 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는 기존의 사업과 차별성 미담보
 -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혁신역량을 시군내에 한정하지 않고, 대내외 관심집단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혁신역량 제고 필요
 - 시군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시행하여 인증제 도입하고, 인증제 승인을 받은 교육생이 시군의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
- 도, 시군간 투자협약제, 시군 행정-민간간 사업 책임제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점검, 평가 방안 마련
 - 홍보팀, 교육팀, 컨설팅팀, 점검·평가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점검, 홍보, 평가 시행
 - 충남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백서제작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실시
 - 행정과 연계하여 분기별(연 4회)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진
 - 모니터링 대상 :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자문회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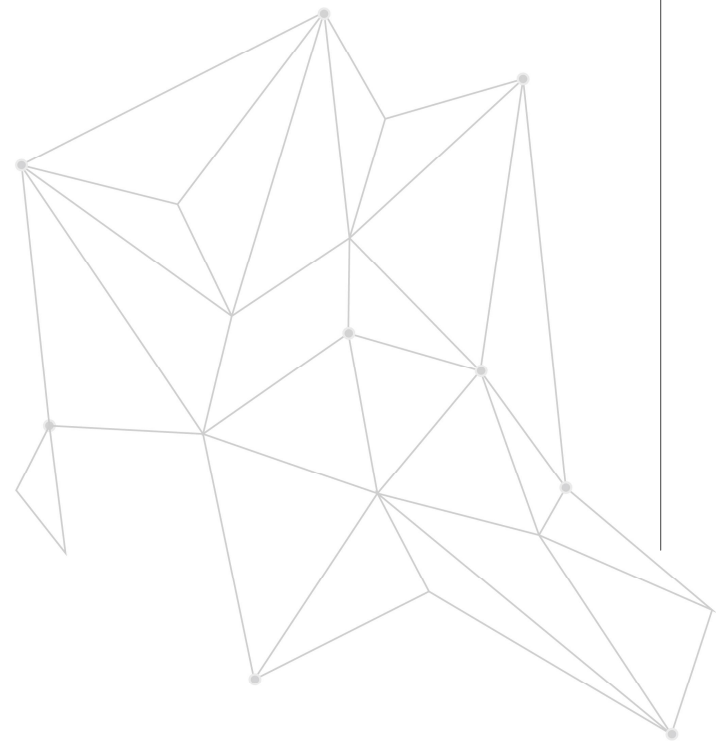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사업 홈페이지 활성화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 도, 시군 균형발전사업 담당자의 교육 및 지원
 - 도,시군별 담당자의 경우 직무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관련 교육 실시
 - 관리자 교육 : 분야별 홈페이지 운영방법, 콘텐츠 작성법(연 2회)
 - 운영자 교육 : 홈페이지 운영전반, 콘텐츠 작성법(연 1회)
 - 직원 요청 시 홈페이지 관리자가 수시 1:1 교육 실시
- 균형발전사업 관련 문서 제출, 시·군별 자료 공람 등의 기능 활용
 - 시군별 균형발전사업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 시군의 관련 사업 자료,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공간 마련
- 기초 자료 정보 제공 및 사업 발굴 지원
 - 현재 사어부진현황 및 성과, 언론보도 등은 관행적인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짐
 - 각종 컨설팅 보고서,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자료, 시군별 기초 DB에 대한 통계 등의 기초 자료 제공
- 사업별 추진 가이드라인 관련 각종 안내 자료 제공
 - 현재) 예비계획서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서 수립 가이드라인은 제공
 -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보 제공 필요
 -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지침 : 사업 변경, 운영세부사항
 - 자체 전문가 활용 가이드라인 : 도, 시군 단순 자문, 총괄 코디, 프로젝트 매니징 등
 - 점검, 평가 가이드라인 : 계획, 추진, 운영관리 등 단계별 점검, 평가 가이드라인
 - 역량강화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 커리큘럼 및 교육과정 소개, 수업자료 등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 및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

참고문헌



- 경기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13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14,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 지침, 2019
- 김현호·김도형,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설계, 2017
-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 2018
- 대한민국, 포용국가정책, 2018
- 박진경·이제연,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2018
- 박진경 · 이제연,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이기원,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우리도 대응전략 수립 연구, 2017
- 정부 T/F합동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
- 충남연구원, 충남 2040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2016.
- 충청남도,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 2019.
- 충청남도,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2020
- 충청남도, 충청남도 발전계획, 2018.
-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2016.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18.
- 통계청, 시군별 GRDP, 각년도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기준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8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18